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39
----------	------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전현희 · 윤종균 · 추미애
김영환 · 문진석 · 이학영
박정현 · 황운하 · 홍기원
강준현 · 이훈기 · 황정아
정준호 · 남인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

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신청·제출) ①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시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신청·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첩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생략)</p> <p>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25조의2(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신청·제출) ①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시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p>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신청·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한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첩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치는 제19조를 준용한다.